다산포럼

식민지 근대화론은 타당한가? (1)

황상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학사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치권까지 끼어든 형국이라 합리적인 해결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사의 중요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기회로 삼을 만도 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일제강점기에 대한 기술이 특히 그러하다. 그 책의 필자들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강점기 동안 조선사회는 많은 부문에서 근대적 발전을 했다고 주장한다.

교학사 교과서의 필자들이 처음으로 그러한 논지를 펼친 것은 아니다. 일제는 침략과 강점기간 내내 자신들의 명분으로 조선(인)의 문명 개화를 내세웠으며, 또 조선이 괄목할 정도로 근대화되었고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함으로써 일본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제국주의자들의 관점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을 위하여 친일한다"는 이광수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조선인 지식인들이 그러한 주장에 동조했다.

해방 뒤 한국사회에서 한동안 듣기 어려웠던 일제에 의해 조선이 근대화되고 발전했다는 주장은 1980년대 무렵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

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상이나 주장도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숙한 사회라면 어떤 사상이나 주장도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수용되거나 걸러진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친일·반일을 따지기에 앞서, 문제의 핵심은 역사적 사실이다. 과연 일제강점기에 근대적인 발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는가 여부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주로 경제(사)학자들이 이에 관한 논쟁을 벌여왔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 논쟁'이다.

하지만 이 논의에는 한계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들이 사용한 경제 지표들은 대개 조선인과 일본인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과 전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가정과 전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거의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데도 학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경제성장이 있었던 점은 학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조선인에 관한 경제 지표를 따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기 어렵다.

경제분야 자료들과 달리 인구와 보건위생에 관련된 자료들은 대부분 조선인과 일본인이 구별되어 있어 조선인의 사정을 직접 알아볼 수 있으며, 일본인과의 비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건강수준은 의료수준 및 배분만이 아니라 소득수준, 교육수준, 사회기반시설 보급 등 한 국가, 사회의 종합성적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건강수준을 파악하면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사회 발전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건강수준을 잘 나타내는 지표로는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비례사망지수가 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800년 무렵부터 쓰였지만, 후진국에서는 20세기 중엽까지도 신뢰할 만한 값을 구하기 어려웠다. 통계 역량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조선도 그러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1950년대 후반 유엔의 권고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책임자 스와루프 등이 개발한 새 지표가 비례사망지수이다. 비례사망지수는 1년간 총 사망자 중 50세 이상 사망자의 백분율이다. 계산방법도 매우 간단하거니와 통계가 부실한 국가나 사회에서도 건강수준을 잘 드러내는 장점이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비례사망지수는 25~30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대만인은 조선인보다 더 열악하여 20~25 수준을 보인다. 일본인은 그보다는 나아 30~40 범위 내에서 1920년대 후반부터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같은 시기 미국인은 50에서 65로 꾸준히 개선되었다.

요컨대 일제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은 건강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종주국 일본은 조금 상황이 나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열악했다.

양동옥의 S 스토리

두 사람이 만들어 내는 창조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성교를 하는 것일까? 진부하기 그지없는 질문을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한 미국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성교를 하는 이유 Top 50'을 학술지에 발표했다. '상대에게 끌려서'라는 이유가 남녀 모두에게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50위권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이유에 몇 가지 요소가 발견된다.

성교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요소는 바로 '정서적 교감'과 '육체적 즐거움'이었다. 사람들은 성교를 통해 상대를 향한 사랑이나 애정을 표현하며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길 원했다. 또 성적 흥분을 발산하며 육체적 즐거움이나 기쁨을 경험하고자 했다. 그 외에 상대의 얼굴이나 육체, 몸짓과 같은 외적 매력에 끌려서 성교를 한다는 이유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며 '상대와 싸우고 화해하고 싶어서'와 같은 갈등의 해소 목적이나 '술에 취해서', '기회가 생겨서'와 같은 건조한 응답들도 종종 있었다.

미혼인 이십 대 남녀를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녀 출산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성교 목적이 빠져 있긴 하지만, 인간의 성교 목적은 크게 종족보존(procreation)과 쾌락추구(recreation)로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은 성교를 통해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하며, 정서적 교감이나 육체적 즐거움을 나누며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인간의 성교는 이 두 기능을 동시에 취하고 있지만, 시대적 가치에 따라서 그중 하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의 성교는 정서적 교감이나 육체적 즐거움과 같은 쾌락추구에 무게들 두고 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발정기가 따로 없어서 언제든지 쾌락을 위한 성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직 인간만이 쾌락을 위한 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은 침팬지와 보노보이다. 사람과 침팬지, 보노보는 비교적 최근인 600만 년 전 공통 조상에서 분화한 만큼 유전체 차이가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교미 행동에는 인간의 성교와 다른 전략이나 목적이 숨겨져 있는지 들여다보자.

수컷 우두머리 중심으로 무리 생활을 하는 침팬지는 무리 앞에 음식을 놓으면 수컷 우두머리가 먼저 먹은 후 자리를 뜨고 그 다음 서열이 차례대로 나눠 먹는 모습을 보이는데, 교미 행동도 같은 형태를 취한다. 발정기가 되면 암컷은 엉덩이 쪽의 성기를 잔뜩 부풀린다. 이 신호에 이끌려 우두머리 수컷은 무리의 모든 발정기의 암컷과 교미한다. 우두머리 수컷이 지쳐서 나가떨어지면 암컷은 우두머리 수컷의 눈치를 살피며, 암컷 주위를 따라다니는 다음 서열의 수컷을 유혹한다. 교미가 끝나면 암컷은 그 다음 서열의 수컷을 또다시 유혹한다. 결국, 발정기에 무리의 대다수 수컷과 암컷이 교미하는 다부다처제를 취하게 된다.

암컷이 여러 수컷과 교미를 하는 꼴인데, 발정기 동안 여러 수컷이 정자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수컷은 누가 자기 새끼인지 알지 모른다. 침팬지의 교미는 철저히 '종족보존'을 위한 암컷의 전략에 휘둘린다. 수컷은 새끼를 보호하거나 먹이를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새끼들을 공격한다. 새끼를 양육하는 것은 전적으로 암컷의 몫으로, 공격해 오는 수컷들을 향해 '이 새끼가 너의 자식일 수 있다'는 혼란을 일으켜 새끼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보노보는 피그미(작은) 침팬지라고도 부르는데, 발정기가 따로 없으며 인간과 흡사한 자유분방한 성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들의 교미 행동은 종족보존을 넘어선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노보 무리 앞에 음식을 놓으면 이들은 망설임 없이 교미한다. 바로 옆 상대가 암컷이건 수컷이건, 젊든 늙든 간에 그 상대를 가리지 않고 교미를 한다. 동성이라면 서로의 성기를 비벼 댄다. 격렬한 교미가 끝나면 그 무리의 가장 연장자인 암컷이 음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인간 세상에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온다면 부모는 때린 아이에게 득달같이 달려가 호통을 칠 것이고 곧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보노보 무리에 같은 일이 생긴다면, 이들은 상대 부모에게 한걸음에 달려가 교미하며 화해를 신청할 것이다. 보노보의 교미 행동은 일차적으로 종족보존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무리의 '갈등을 해소'해서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목적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들의 교미가 문란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몸짓이다.

보노보가 갈등의 해소라는 인간과 유사한 이유 중 하나로 교미를 한다고 해도 '보노보가 교미를 하는 이유 Top 50'이라는 연구가 나올 수 없듯이, 다양한 이유와 마음의 무게로 성교를 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다. 성교는 다음 세대와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창조(creation)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성교는 '두 사람이 만들어 내는 창조'이다. 부부간 그리고 연인 간에 이런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창조를 위한 성행동을 하고 있는가?', '한 사람의 창조 행위를 위해 상대의 창조를 희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기고

방사능 대비책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김용하
광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근래 우리 주변에서 평소 즐겨 먹던 명태나 고등어, 갈치 등의 수산물을 먹어도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고민이 대두되고 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때문이다. 날마다 전달되는 소식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유출된 냉각수가 유입되어, 바닷물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생선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해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다. 급기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어류는 수입이 중단되었다.

방사선과 방사능 물질에 접촉이 되면 그 양에 따라서 수개월 이내에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으면서, 후유증으로 신경조직을 파괴하거나 암 등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느 한때, 어느 한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고, 수십 년 혹은 대를 이어서 유전자 변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니 그 공포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를 통해 오랫동안에 걸쳐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니 이런 보이지 않는 공포에 초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지난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만 보더라도 원전주변 30km 이내의 강제이주자가 9만2000명, 6년간 발전소 해체작업 인부 5722명과 민간인 2510명이 사망하고, 약 43만명이 암, 기형아 출산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그 영향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다 한다.

27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 반경 30km까지는 유령도시로 변하여 있고, 80km 내에서는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한다.

직접 피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수를 통해서 식수원과 지상의 모든 생물과 식품재료, 바다의 생물이 오염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고, 생존에 대한 가치관조차도 어떻게 변하게 될 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도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미 여러 개의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여름의 전기사용 실태를 보더라도 원자로 한기만 가동이 중단되어도 당장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타격이 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수요 감당을 위해 원자력을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우리와 근접해 있는 북한에서 철저한 안전장치도 없이, 졸속으로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비롯하여, 화생방무기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건강과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방지장치는 물론이고, 방사능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대비, 행동수칙의 제정 등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전시에 대비해서 민방위훈련, 화생방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근래에는 이러한 교육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안별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리라 믿는다.

다문화가정 주부 친정보내기 더 많이 지원해주길

친정이 전라도 순천의 농촌이다. 지금도 부모님은 농촌에서 농업을 하고 계신다. 필자의 친정에는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에서 시집 온 다문화 가정 두 가구가 살고 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로하고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문화 가정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반응을 얻는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은 다른 지방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꽤 많이 하는 걸로 안다.

이 다문화 가정 신부들은 이미 한국 국민이다. 우리 땅에 시집 와서 아기도 낳고 농촌을 지키면서 잘 살아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지금까지 친정을 제대로 방문하기 힘들었다 한다.

사실 다문화 가정 주부들 누구든지 친정에 가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겠는가. 한국에 시집 와서 사는 모든 외국인 신부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뉴스를 접해 보면 그 많은 다문화 가정을 모두 보낼 재정적 여력이 안 되니 우선 몇 가족씩 선발해 순차적으로 보낸다고 들었다. 그렇게 되면 그 차례를 기다리느라 얼마나 마음 졸이고 힘들까.

지금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이주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한국인이 되어 살고 계시다. 이분들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농촌으로 시집 온 다문화 가정 주부들의 경우 농사일도 적잖고, 경제적 형편도 아직은 여의치 않아 친정 가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향수병도 생긴다고 들었다.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다문화 가정 신부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시민단체와 기업 등에서 적극 나서서 다문화 가정 주부들의 친정 보내주기 행사를 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선행이 온 농촌에 많이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윤빈·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社 說

내년도 지역 국책예산 최대한 끌어올려야

민주당이 '원내투쟁' 강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파행 중이던 정기국회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여야는 23일 전년도 결산심사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의결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상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따라서 내년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2014년 국비 지원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는 2012년 국비 2조 원을 돌파한 지 2년 만에 '3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전남도는 내년 국고 예산이 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분을 감안하면 최종 확보액은 7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수치만 가지고 낙관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가 요구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비 40억 원과 광주연구개발특구(R&D)도로 건설비 60억 원 등이 누락됐고, 전남도의 F1대회 운영비(204억 원)는 아예 미반영됐으며, 상당수 사업이 '찔끔예산' 지원에 그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데다 이들 사업이 대부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이 누락되거나 삭감된 국고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고,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지역 발전을 위해 내걸었던 대선공약이 헛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에 보여주는 진정성이기도 하다.

어수선한 광주교육계, 학부모는 불안하다

2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안돼 광주지역 교육현장이 어수선하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말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지시에 국공립 중등교장단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뒤숭숭하다.

여기에다 촌지를 받았다가 학교 직원 제보로 해임됐던 초등 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가 줄어 전임지로 복귀된 것을 놓고도 허술한 교육행정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광주시내 국공립 중등 교장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학폭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 법규대로 학교장의 권한으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기재 보류' 지시에 반해 교육부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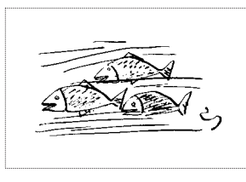
이에 앞서 광주지역 고교 교장들도 대입 혼선과 광주지역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부의 '학폭 학생부 기재' 지시를 수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중등교장단의 결정은 학생 인권을 최우선시하며, 위헌 소송 관결 때까지 학폭 기재를 유보시킨 한 현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또한 '명절 떡값'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광주의 한 초등 교장이 복직하면서 이를 제보했던 교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불편한 상황이 빚어져 말썽이다. 시교육청은 소청위의 결정이 2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나오는 바람에 내년 3월 정기인사 시기까지는 현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한편으로 시교육청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폭 기재를 유보시킨 처사에 공감하는 측면도 많겠으나 실행 과정에서 잡음과 갈등이 계속된다면 학부모들의 입장에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시교육청은 원칙대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측의 여론을 수렴해 그에 걸맞는 교육행정을 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교육의 정당성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無 等 鼓

전어



허영만의 만화 '식객' 1권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한 남자가 한강 인도교에 올라가 자살 소동을 벌인다. 복권 당첨금 2억 원을 들고 도망간 아내를 당장 데려오라는 그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때 주인공 성찬이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난간에 오른다. 그가 들고 간 것은 바로 전어.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전어를 꺼내 비늘을 치고, 칼집을 살짝 낸 다음 소금을 뿌리고 석쇠에 굽는다. '치치익~' 전어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아무말 없이 성찬은 전어를 먹으며 소주 한잔을 들이킨다.

하필, 이 남자는 경남 사천 출신이다. 사천은 전어로 유명한 동네다. 전어맛을 아는 남자는 곧바로 소주잔을 받아쥐며 이야기한다.

"전어는 머리부터 씹어묵어야제!!"

"우리 사천사람들은 전어맛을 알지예. 전어는 소금구이도 좋고, 채썬 무수에 초고추장으로 버무리도 끝내주지예."

전어가 사람을 살린 유쾌한 이야기다.

전어는 가을에 먹어야 제맛이다. '가을 전어에는 깨가 서말' '집나간 며느리가 전어맛 때문에 돌아왔다'는 속담도 있다. 가을이면 두둑하니 살이 오르고 배에 기름기가 돌고 군침도 절로 돈다.

전어의 어원에 대한 설은 여러가지다. 그 중 대표적인 게 조선 실학자 서유구가 '난호어목지'와 '임원경제지'에 적은 글이다. "귀천(貴賤)이 모두 좋아하고, 그 맛이 좋아 사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어(錢魚)라고 한다"고 적고 있다.

반면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모양이 '화살촉'을 닮았다해서 '전어'(箭漁)라고 쓰여있다.

제철을 맞아 서남해안 곳곳에서 전어축제가 한창이다. 보성축제는 아쉽게도 막을 내렸고, 경남 무창포와 보령 전어축제는 10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식객'에는 허영만 화백이 소개하는 '전어구이' 요리법이 실려 있다. 혹시 집에서 요리할 때 참고하면 좋다.

전어는 회로, 무침으로, 구이로 먹어도 다 맛있다. 가을이 가기 전 행복한 전어파티는 어떤가. 좋은 이들과 함께라면 금상첨화겠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